Special Feature

독일 2011년 노동시장 전망 : 경기침체 기간과 그 이후의 독일 노동시장

Sabine Klinger (독일 고용연구소(IAB) 노동시장분석팀장)

■ 머리말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독일에도 영향을 미쳤고 2009년 독일의 실질 GDP는 4.7% 하락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치인 바 그 이유는 독일이 전 세계 최대의 수출중심 국가이기 때문이다. 위기가 주로 미국에서 발생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GDP는 겨우 2.7% 하락했다. 하지만, 양국 노동시장의 변화는 상당히 달랐다. 미국의 실업률이 3.5%에서 9.4%로 상승한 반면 독일의 실업률은 거의 안정세를 유지했다. 단지 0.2% 상승한 7.8%를 기록했다(자료 : OECD). 경기침체에 대한 과거 노동시장의 반응을 고려하면 독일 GDP가 거의 5% 하락할 경우 15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야 했다(Möller, 2010).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수는 겨우 5,000개 줄었을 뿐이었다.

■ 독일 노동시장의 두 가지 놀라운 사실

확실히 기업들은 과거와는 달리 행동했다.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대신 내부 조정전략을 사용했다(그림 1 참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히 공공재원 지원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인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2009년 3.1% 감소했다(자영업을 포함할 경우 −2.5%). 또한, 독일 경제 역사상 처음으로 근로시간당 생산성이 하락했다.

[그림 1] GDP 변화에 따른 고용, 근로자 1인당 근무시간, 생산성의 반응

자료 : Destatis, IAB.

실제로 이번 위기에 대한 노동시장의 반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놀라운 것이었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에 시달려 왔다. 경제적 충격과 제도가 결합되어(예: 높은 해고비용, 관대한 실업보험) 197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실업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Blanchard, 2006). 매번 경기침체는 급격한 실업 증가를 유발했으며 다음 번 호황기 동안 이를 줄일 수 없었다. 노동시장의 반응은 약했으며 경기회복에 비해 오랫동안 뒤처졌다.

2005년 실업이 최고조에 달한 뒤 – 486만 명, 즉 1991년 대비 187지수포인트 – 경제 주기와 노동시장 간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위기 초의 호황기 동안 실업은 신속하고 급격하게 감소했다. 노동시장 패턴의 변화는 지난 위기에서 더욱 명확해졌다. GDP가 1930년대 초반 대공황 이후 가장 가파르게 하락했으나 실업은 과거보다 매우 적게 증가했다. 이것이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이다. 경제학자들은 기업 내 노동력의 방대한 버퍼로 인해 경제회복기에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이 즉시 나타났다. 경제와 노동시장이 시간차 없이 모두 동시에 회복했다는 점이다. 2010년 중반이 되자 고용과 실업은 위기 전의 수준에 도달했다. 따라서 지역과 분야별 특수성을 무시한다면 독일 노동시장은 겨우 1년 반 만에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일반적

으로 금융위기 발생 이후 경제회복에는 2년, 노동시장 회복에는 5년이 소요되는 것에 비교해서 이렇게 신속한 회복은 특히 더욱 인상적이다(Reinhart/Rogoff,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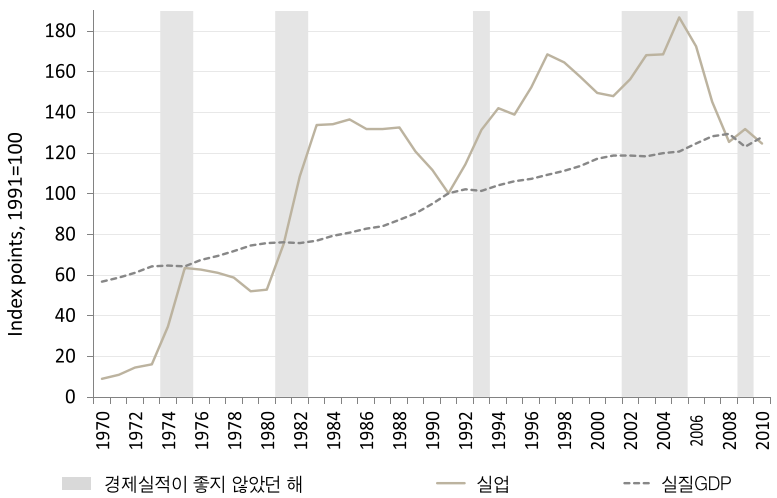
■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발생한 이유

독일 노동시장에 대한 제도 변화

[그림 2]는 위기에 대한 노동시장의 약한 반응과 신속한 회복에 대해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Blanchard(1997)와 Landmann/Jerger(1993)는 제도적 변화뿐 아니라 거시경제적 충격 이후 조정과정에는 몇 년이 걸리며 이는 경기 주기 움직임을 상쇄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만 196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실업률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독일의 경우, 2003~2005년 이른바 하르츠 개혁(Hartz Reforms)이 실시된 후 노동시장 제도가

[그림 2] GDP, 실업과 GDP 장기 동향 : 1970~2010



자료 : 연방고용청(Federal Employment Agency), Destatis.
계절적 요인을 보정한 데이터, 기준점1991=100, 1970-1990: 이전 FRG.

매우 크게 변했다. 이러한 개혁은 흐름의 변수를 통해 실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실업으로의 유입을 줄이고 실업에서 정규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간편하게 하는 것이다. Jacobi/Kluve(2007)는 개혁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실업자의 구직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간략히 정리했다.

① 노동시장 서비스와 정책 조치의 효과성과 효율성 향상 : 따라서 공공고용기관들을 현대화했다. 2003년 이래 고용알선서비스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구직이 어려운 실업자를 위한 인적 서비스기관을 구성해 실업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비경제활동 기간 동안 이들이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② '권리와 의무' 원칙에 따른 실업자 고용 활성화 : 신생기업 보조금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조치는 실업자의 자기 책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재통합 노력과 관련된 목표를 실업자와 채용 담당자가 협상한다. 자기책임 강화를 위해 실업수당 제도와 형편이 어려운 구직자를 위한 사회지원을 재구성했다. 실업자가 세금 기반의 지원을 받으려면 구직노력을 입증해야 한다.

③ 노동시장 규제완화 : 파견근로, 해고 보호, 유기 계약직 관련 규제를 줄였다.

노동시장 제도 변화로 인해 임금은 완화되었고 실업자들은 양보를 할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실업에서 고용으로의 전환이 증가했으며(Fahr/Sunde, 2009 ; Klinger/Rothe, 2010) 구조적 실업률이 떨어졌다(SVR, 2008 : 284f). 이번 위기가 독일에 닥쳤을 때 독일 노동시장 조정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경제 주기의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인 구조개혁의 효과로 둔화되었다(Gartner/Klinger, 2010 ; Boysen-Hogrefe et al., 2010).

재정프로그램의 역할

제도적 변화와 임금완화라는 긍정적 효과 이외에도 독일 정부가 국가적 주체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분별 있는 대처를 한 것이 강력한 위기 대응에 기여했다. 은행계좌 지급보증은 독일을 더 많은 불확실성, 즉 패닉과 뱅크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이었다.

재정프로그램은 마찬가지로 침착한 재계 및 소비자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많은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강력한 노동시장의 반응을 확실히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의 특별 진작책뿐 아니라 세금과 사회보험료 감면이 구매력 하락을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재정프로그램의 시기와 다양성이 도움이 되기는 했으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Feil /Gartner, 2009).

널리 잘 알려진 독일 정부의 조치는 경제적 근로시간 단축제도(economic short-time work)에 대한 전제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연방고용청은 근로시간 감소분에 대한 순수입 중 60%(가장의 경우 67%)를 지급한다. 하지만, 경제적 근로시간 단축제도에는 몇 가지 위험이 따른다. 즉 쓸모없는 생산과정을 강화하고 매우 많은 비용이 수반되며, 단순히 실업을 연기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전제조건이 엄격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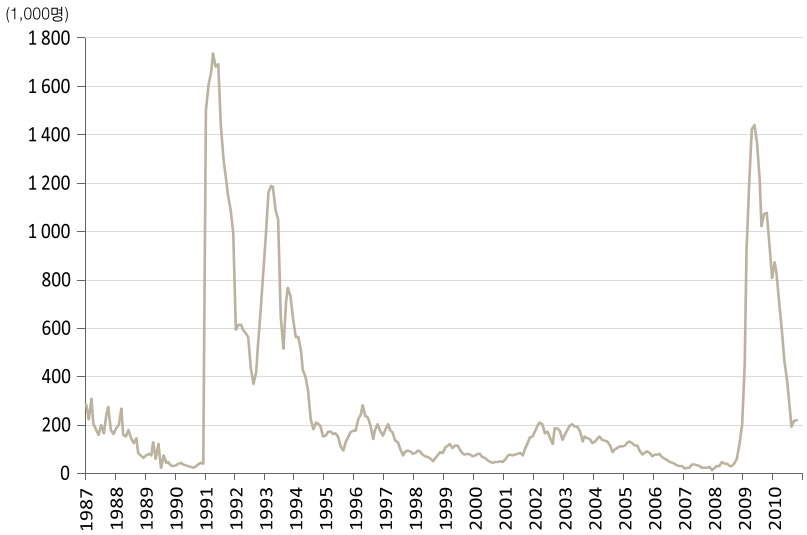
하지만, 경제위기 동안 높은 실업을 피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2010년 말까지 이 전제조건을 완화했다. 첫째, 접근이 더 수월해졌다. 근로자의 1/3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요건이 효력을 잃었다. 사용자와 노조가 협상해 근로시간 계정을 마이너스로 감축하거나 노사 간 합의된 고정 수치로 감축하는 등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한 다른 제도를 우선 이행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할 필요가 없었다.

둘째, 사용 범위가 더욱 확산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허용되었다.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최초로 허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유인책을 확대했다. 사용자의 사회보장분담금의 절반을 환급해 주었다.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중 교육훈련을 받거나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사회보장분담금 전체를 환급해 주었다. 그 결과, 경제적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2009년 5월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약 144만 명의 근로자들이 평균 30%의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그림 3 참조). 산업별 분포는 다양했다. 2009년 제조업 근로자의 12.1%가 근무시간을 단축했으나 서비스 분야의 경우 0.7%에 불과했고 전체 평균은 3.2%이었다.

하지만, 1993년[1]에 발생했던 그 이전의 경기침체와 비교했을 때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눈에 띌 만한 수단이 아니었다. 게다가, 2009년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겨우 1/3만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했다(그림 4 참조). 이 제도와 유사하게 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한 또 다른 제도는 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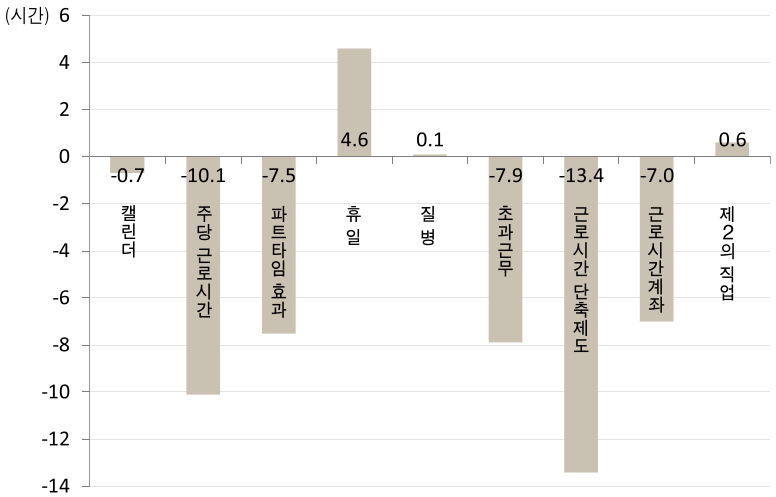
1) 1991년 동독이 시장경제로 전환한 후 실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사용되었다.

[그림 3] 경제적 근로시간 단축제도 해당 근로자수 ; 1987~2010



자료 : 연방고용청(Federal Employment Agency). 2008년까지 계산의 근거: 기업 보고서, 이후: 기업 비용 영수증.

[그림 4] 2009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41.3시간 단축의 구성 요소



자료 : IAB 근로시간 계산.

일한 시간의 단축, 즉 초과근로시간 및 근로시간계좌(working time account)에서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전체 근로시간 단축의 1/4은 노조와 사용자단체들의 교섭을 통한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서 발생했다. 근로시간계좌와 단체협약에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다루는 기업의 숫자가 1990년대에 증가했다는 것이 또 다른 제도적 변화인 것이다. 그 결과, 경제위기 동안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다.

위기 구조

마지막으로 위기는 독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금융 및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유입되었다. 따라서 물류뿐 아니라, 철강, 기계, 화학제품 등 수출중심의 부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반면 서비스 부문의 타격은 덜했다.

이번 경제위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경제위기 초 호황으로부터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던 해당 산업(및 지역)이 타격을 받았다. 호황기 동안 제조업의 생산지수는 18.8% 올라간 반면 총 GDP는 겨우 이 수치의 절반인 9.4% 증가했다. 따라서 위기가 독일 제조업체들에게 닥쳤을 때 생산성뿐 아니라 재정적 대안의 상태가 좋았다. 이들은 재정적으로 노동력을 비축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산업은 이미 노동력 부족에 만성적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었다. 예를 들어, 기계와 금속산업의 경우, 2008년 채우기 어려운 공석의 비중이 거의 50%에 달했다(출처 : German Job Vacancy Survey). 따라서 사용자들은 노동을 비축하고 경제가 회복된 뒤 구인, 채용, 훈련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노동력 공급 감소와 관련해 그럴 듯하지만, Klinger et al. (2011)은 노동력 부족이 독일의 고용 기적을 설명한다는 계량경제학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의료서비스와 교육 같은 서비스 부문들은 위기 동안 채용을 지속했다. 신규 일자리는 주로 파트타임과 여성 분야에서 생겨났으며, 이는 해고나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이들을 위협할 경우 가족의 수입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종합적으로 위기 동안 고용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가 발생할 당시 좋은 제도 및 경제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 탄력적이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낮은 임금 증가, 서비스산업의 호황이 겹쳐져 독일의 고용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2011년 노동시장

변화의 전망은 하르츠 개혁 이후 조정과정이 완료되는지의 여부와 경제적 여건이 2010년만큼 유리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 2011년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

경제전망

연방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 최초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독일의 실질 GDP는 3.6% 증가했다고 한다. 연간 데이터 측면에서 경제위기는 2011년 극복될 것이다. 분기별 데이터를 보면 GDP 지수포인트는 2010년 말 위기 전 수준에 도달했다. 주로 아시아로부터의 해외 수요와 국내투자가 경기를 부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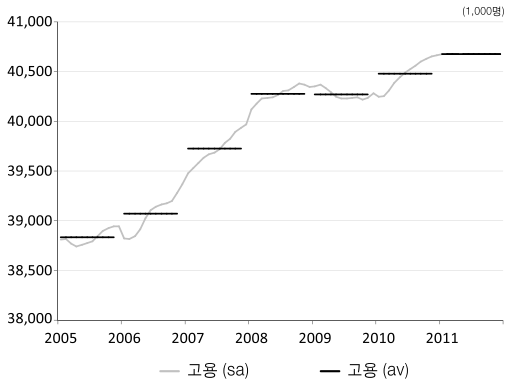
2011년 1월 현재, 독일 전문가들은 2011년에도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지만 2010년보다는 속도가 낮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제확장이 둔화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전 세계적인 위기 후 회복이 정상적인 상승으로 변화될 것이다. 둘째, 2009년 초 시작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프로그램은 2010년 말까지 그 시한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건설 프로젝트 완료 등 몇 개의 진작책만이 2011년 장기적 효과를 낼 것이다. 셋째, 재정정책이 정리과정으로 접어든다. 간접세와 사회보험료가 증가하고, 실업일 경우 부모 이전과 관련해서 등 정부지출이 사회 분야에서 특히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2011년 실질 GDP는 겨우 2~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연구소(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의 노동시장 전망은 GDP 성장률 2.25%를 가정으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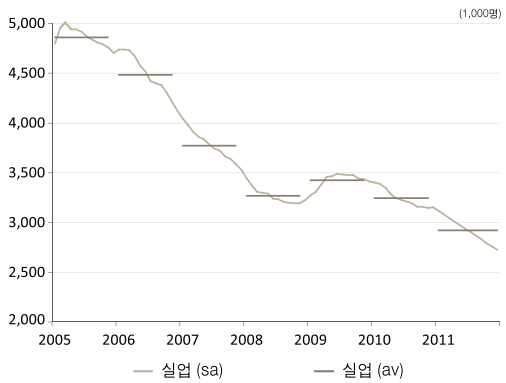
노동수요 : 낮은 역동성

2010년 4분기 경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실업 개선율은 떨어지기 시작했다(그림 5 참조). 이러한 결과가 상기 언급한 긍정적인 개혁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림 5] 2005~2011년 고용 비축치
(계절적 변화를 고려한 월간 데이터 및 연간 평균)



[그림 6] 2005~2011년 실업 비축치
(계절적 변화를 고려한 월간 데이터 및 연간 평균)



자료 : Destatis, 연방고용청(Federal Employment Agency). 2011: IAB 전망. 진정한 월간 변화는 이러한 선형 그래프와 다를 수도 있음.

또한, 노동시장 지표들은 월간 고용변화가 2011년 매월 평균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는 평가를 확인해 준다. 예를 들어, 실업이 아닌 상태의 사람들이 구직에 유입되는 것이 증가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겨울의 계절적 패턴보다 고용이 더 강력하게 감소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약간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독일 노동시장은 통계적 이월 효과를 가지고 2011년을 시작했다. 연말 고용 비축이 2010년 연간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발생한 보너스였다. 따라서 2010년과 2011년을 연간 평균 측면에서 비교할 경우 고용이 280,000, 즉 0.7%나 강력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고용은 사상 최대인 4,067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 고용 중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제도[2]가 제공된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마이너스 동향을 보이기는 했으나 사회보장이 제공되는 일자리는 위기 전 호황기 동안 증가했다. 위기 동안 약간 줄었으나 곧 다시 회복했다. 따라서 총 고용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제공되는 일자리가 차지하

2)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사회적 보험인 의료, 실업, 연금보험 혜택을 받는다.

는 비중은 최대 68.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고용을(한계고용, 자영업)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의 결과 그 비중은 1990년대 초반 대비하여 여전히 낮다. 그 당시 일자리의 3/4 이상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2010년 10월 약 2,828만 명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일자리 중 파견근로자의 비중은 겨우 2.7%이었다. 고용의 변화와 관련해 파견근로자들은 경제 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2010년 10월 파견근로자는 2009년 10월 이후 사회보장제도 혜택이 제공되는 498,000개의 일자리 증가의 37.6%를 차지했다.

근로시간 : 버퍼를 재생성

2009년 대폭적인 근로시간 단축의 대부분은 2010년 상쇄되었으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속한 평균 근로자수는 2009년 114만 명에서 2010년 50만 명으로 하락했다. 2011년 근로시간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근로시간 감축을 향한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를 상쇄시킬 것이다.

따라서 주당 근로시간은 늘어나게 되고 풀타임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위기 전 수준에 가깝게 될 것이다.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약 30시간이 될 것이다. 파트타임 비율은 약간 증가해 35.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3].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수는 1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경제주기 하락을 좁히는 데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을 때와 비슷한 정상적인 연도의 숫자이다. 하지만, 계절적 및 이전 근로시간 단축(transfer short-time work)은 점차 더 중요해진다.

경제회복 과정에서 노동시간계좌 잔액은 증가할 것이며 근로자들은 더 많은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연간 근로시간은 0.5% 증가한 1인당 최대 1,422시간까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1% 증가하지만 이는 -0.5%라는 큰 폭의 캘린더 효과로 상쇄된다.

3) 여기에는 한계고용(통상 낮은 근로시간, 최대 임금은 월 400유로, 낮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지불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포함된다.

노동력 공급 : 지속적으로 감소

과거 몇 년째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노동력 공급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인구 변화가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인자라면 잠재노동력은 2011년 20만 명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독일로 이주해 오고,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한다면 이러한 감소는 부분적으로 상쇄되어 잠재노동력은 11만 5,000명 감소할 것이다. 2011년 4,409만 명이 노동력을 공급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노동력 잠재력 감소는 노동시장과 실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중기적으로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 감소가 항구적이며 확산된 현상이 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3년간 노동력 부족은 주로 의료서비스와 공학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Heckmann et al., 2010).

실업 : 통일 이후 최저

잠재노동력과 고용 사이의 격차로 인해 실업이 발생한다. 2011년 실업 측정치는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376만 명 이래 최저치에 달할 것이다.

실업은 2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 고용기관에 등록된 실업자와 잠재실업자이다.

잠재실업자에는 교육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조치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실업상태이지만 해당 고용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를 포괄한다. 등록실업자와 잠재실업자 모두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은 2010년 324만 명(7.8%)에서 2011년 연간 평균 292만 명(실업률 7.1%)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감소분의 상당 수는 2010년 말 통계적 이월 효과 때문인 것 같다. 잠재실업자는 11만 명 감소할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조치가 줄어들고 안정적인 경제 주기 발전이 기본적으로는 실망한 근로자를 노동시장에 진출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 조치의 감축이 상당히 크게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 중 일부는 고용이 아니라 잠재실업자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예를 들어, 공공재원이 투입된 일자리창출 제도), 독일 노동시장은 고용이 증가하지만 실업이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약하게 줄어들게 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 맺음말

경제위기로 독일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고 2009년 실질 GDP가 4.7% 줄어들었으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과거보다는 훨씬 약했다. 서비스 부문은 채용을 계속 했고 경영계는 많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과 생산성을 대폭 줄이는 등 내부 조정전략을 사용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독일 노동시장이 지체없이 위기에서 회복되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이 경제위기의 영향을 덜 받은 것과 신속한 회복을 한 것을 설명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2003~2005년 몇 번의 개혁이 실시된 후 독일 노동시장의 이력(hysteresis) 패턴이 사라졌기 때문에 구조개혁의 긍정적인 효과가 경기순환에 따른 하락을 막았다는 증거가 있다. 또한, 위기가 외부에서 독일로 유입된 것이며, 따라서 국내 경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원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위기를 방어하려는 재정프로그램이 결정적이지는 않았으나 도움이 되었다.

2011년 고용과 실업의 연간 평균 수치는 더욱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지표들은 경제발전이 둔화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개혁 효과가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결과, 매월 변화수준은 평균적으로 매우 적을 것이다. 고용 0.7% 증가와 실업 0.7% 감소라는 상당한 수치들은 단순히 2010년 말 통계상 얻는 보너스 때문이다. 12월 수치들이 연간 평균 수치보다 훨씬 좋다.

2011년 독일경제와 노동시장의 기본적인 여건이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독일은 과거의 확장기 시절보다 훨씬 더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여전히 세계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인 불안정한 미국의 상황뿐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높은 부채로 인해 심각한 위험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과 유럽 정치인들은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려운 과제에 당면해 있다. KLI

참고문헌

- Blanchard, O. J. (2006), "European Unemployment: The evolution of facts and ideas, *Economic Policy* 45, pp. 5~59.

- Blanchard, O. J. (1997), "The Medium Ru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pp. 89~158.
- Boysen-Hogrefe, J., Groll, D., Lechthaler, W. and C. Merkl (2010), "The Role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in the Great Recession, *Applied Economics Quarterly Supplement* 56(61), pp. 65~88.
- Fahr, R., U. Sunde (2009), "Did the Hartz Reforms Speed-up the Matching Process? A macro-evaluation using empirical matching functions," *German Economic Review* 10(3), pp. 284~316.
- Feil, M. and H. Gartner (2009), Konjunkturprogramme gegen die Krise, IAB Forum Spezial, 32~37.
- Gartner, H. and S. Klinger (2010), "Verbesserte Institutionen für den Arbeitsmarkt in der Wirtschaftskrise", *Wirtschaftdienst* 90(11), pp. 728~734.
- Jacobi, L. and J. Kluve (2007), "Before and after the Hartz Reforms: The performance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y in Germany, *Zeitschrift für ArbeitsmarktForschung* 40(1), pp. 45~64.
- Heckmann, M., Kettner, A., Rebien, M. and K. Vogler-Ludwig (2010), Stellenbesetzungen in Zeiten der Krise, IAB Kurzbericht, 23/2010.
- Klinger, S., Rebien, M., Szameitat, J. and M. Heckmann (2011), "Did Recruitment Problems Account for the German Job Miracle?,"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Papers*, forthcoming.
- Klinger, S. and T. Rothe (2010), "The Impact of Labour Market Reforms and Economic Performance on the Matching of Short-term and Long-term Unemployed," IAB Discussion Paper, 13/2010.
- Landmann O. and J. Jerger (1993), "Unemployment and the Real Wage Gap: A reappraisal of the German experience,"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29(4), pp. 689~717.
- Möller, J. (2010), "The German Labour Market Response to the Crisis ? De-mystifying a miracle," *Zeitschrif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42(4), pp. 325~336.
- Reinhart, C. M. and K. S. Rogoff (2009), "The Aftermath of Financial Crise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99(2), pp. 466~472.